

대법원 2017도20216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 공보관실(02-3480-1451)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8. 2. 13.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자인 피고인(염○○)이 '2016. 3. 25.경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등록 시 자신의 재산총액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행위'에 관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공표) 위반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도20216 판결)

1. 사안의 내용

■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후보로 태백시 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선거구에 출마한 자임
- 피고인은 2016. 3. 25.경 후보자등록 시 제출서류인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에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133 외 8필지(이하 '의사건 토지')의 정상 재산가액(공시지가)이 26억 76,484,000원임에도 이를 13억 38,239,000원으로 기재하여 축소 신고하였고, 그 무렵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공보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후보자인 피고인의 재산총액이 19억 20,613,000원임에도 이를 5억 82,368,000원으로 게재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 공표죄)을 위반한 것으로 기소됨

■ 소송 경과

● 제1심 : 유죄(⇒ 벌금 80만 원)

● 원심 : 항소기각

2. 대법원의 판단

가. 사건의 쟁점

■ 피고인에게 재산 내역의 허위 공표에 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의 변소 : 피고인이 후보자등록 시 제출한 재산신고서의 재산 신고 내용은 피고인의 비서가 착오로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인 소유지분의 가액을 잘못 기재한 것임. 피고인에게 재산내역을 허위로 공표한다는 인식이나 이에 관한 용인의 의사가 없었음)

나. 판결 결과

■ 상고기각 (유죄 확정)

다. 판단 근거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허위사실에 대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와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와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과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고,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도 성립됨

■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의 재산신고가액과 재산총액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 관한 피고인의 미필적인 고의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음

● ① 이 사건 재산신고서 등에 기재되거나 게재된 재산가액과 실제 재산가액의 차이의 정도가 13억 원 이상으로 매우 큼

● ② 피고인이 과거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차례 신고한 재산신고액과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재산신고서 등에 기재된 재산신고액이 상당

한 차이를 나타냄

- ③ 2013년과 2015년에 방송, 신문 등에서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도와 이에 관한 피고인의 이의제기와 정정 보도 요청이 있었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도 피고인의 재산취득과정 등이 문제가 되었음.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신고된 재산총액이 상당히 적은 금액이라는 사정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3. 판결의 의의

-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자인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재산신고서에 기재되거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공보 등에 게재되어 공표된 이 사건 토지의 재산신고가액과 재산총액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피고인의 미필적인 고의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임